

도·농 복합형태의 시 특별지원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정부는 도농간의 균형발전 도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95년 1월 1일자로 충청북도 충주시, 재천시를 포함하여 전국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발족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통합시 절감이 예상되는 연간 150억원 이상을 군지역의 낙후지역 개발비와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재투자 한다고 공언 하였고,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천명함과 아울러 도농 통합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지원, 개발촉진 지구의 우선지정,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시행하는 각종 시책사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에 도농 통합시의 주민들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이 통합 이후에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발전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특별지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 이후의 정부 특별지원은 통합기념 특별교부세 20억원 외에는 없으며, 기 추진하고 있던 군 문화사업 행사는 없어졌고,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혜택도 배제되었으며, 연차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면 자치시대에 돌입하여 민선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개발이 절실한 농어촌 지역보다 더이상 개발여지가 없는 인구 과밀 도시지역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역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소외의식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

정이나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이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러한 때아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도농 통합 기본정신을 되살려 당초 약속대로 전폭적인 특별지원을 통해 도농 통합시를 지역거점 도시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만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150만 충청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다 음

- 첫 째,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조 1~3항의 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
- 둘 째, 도농 통합형태의 시 설치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른 도의회 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민의의 대변자인 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촉구한다.
- 셋 째, 도농 통합으로 절감이 예상되는 연간 1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도농 통합시 농어촌 지역에 집중 투자할 것과 이의 명확한 투자계획과 집행계획을 공개토록 촉구한다.
- 넷 째, 내무부의 충청복도는 통합당시 주민에게 제시하였던 각종 약속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통합이전 군지역에 팽배해 있는 행정불신과 소외감, 배신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 다섯째, 교육부는 통합으로 배제된 종래 군지역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을 다른 농어촌 지역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 여섯째, 위의 촉구사항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민들의 종래 군 회복운동을 비롯 법률적·사회적·정치적 저항운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충청복도에 있음을 밝히둔다.